



KIEP 기초자료  
19-15

2019년 8월 28일

# 홍콩 시위 사태의 영향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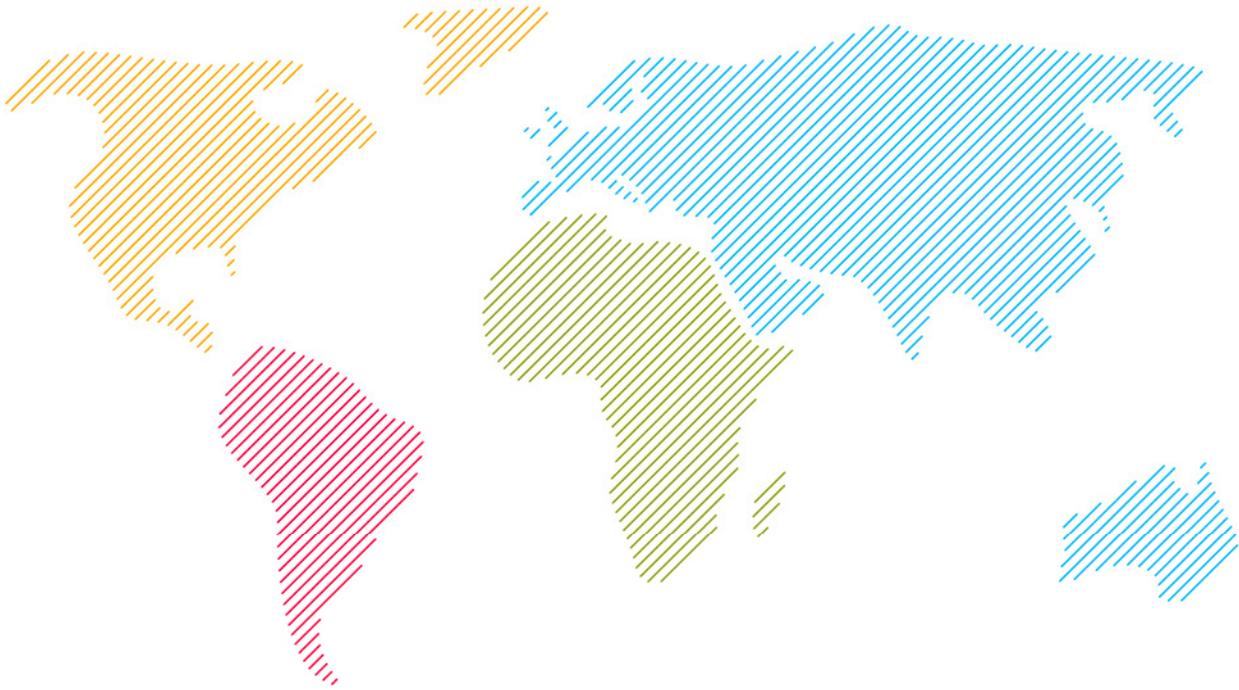
- 이승신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장  
(sslee@kiep.go.kr, 044-414-1235)
- 양평섭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  
(pasyang@kiep.go.kr, 044-414-1121)
- 허재철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부연구위원  
(jcheo@kiep.go.kr, 044-414-1042)
- 연원호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팀 부연구위원  
(whyeon@kiep.go.kr, 044-414-1022)
- 현상백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팀 부연구위원  
(sbhyun@kiep.go.kr, 044-414-1284)
- 김효상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금융팀 부연구위원  
(hyosangkim@kiep.go.kr, 044-414-1065)
- 양다영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금융팀 전문연구원  
(dyyang@kiep.go.kr, 044-414-1223)
- 김흥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전문연구원  
(hwkim@kiep.go.kr, 044-414-1278)
- 김유리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금융팀 연구원  
(yrkim@kiep.go.kr, 044-414-1326)



## 홍콩 시위 사태의 영향 및 시사점

### 요약

- ▶ 2019년 3월 홍콩 정부의 「범죄인 인도 법안」 추진을 계기로 시작된 홍콩 시위 사태가 최근 반(反)중국 및 민주주의 자유를 요구하는 시위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임.
  - 홍콩 시위 사태의 직접적인 배경은 「범죄인 인도 법안」 추진이나, 정치적으로 홍콩의 행정장관 선출 방식에 대한 홍콩 내부의 불만, 경제적으로 빈부격차 및 대(對)중국 경제 의존도 확대에 대한 우려 외에 사회·문화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임.
  - 홍콩 시위 사태 관련 시위대, 홍콩 및 중국 정부 간에 사태 해결에 대한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시위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음.
- ▶ 홍콩 시위 사태는 유사시 국제적 위상 변화에 따른 홍콩의 경제적 기능 약화, 홍콩의 대외신뢰 하락에 따른 중국의 경제적 피해 등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됨.
  - 홍콩 정부가 비타협적 자세를 견지하면서 교섭이 정체되고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시위대의 동력이 약화되어 자연적 안정화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음.
  - 그러나 이번 시위 사태로 인해 홍콩의 자율성 및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며, 홍콩이 보유한 제도적 경쟁력이 점차 상실됨과 함께 홍콩의 신용 위험 및 자금조달 비용 상승으로 국제금융 시장에서의 입지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 홍콩은 중국의 자금조달 창구이자 중계무역항으로서 홍콩을 경유한 외국인투자 위축 및 교역량 감소로 중국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위안화 국제화 등 중국의 글로벌 금융패권 정책의 진행에도 어려움이 예상됨.
- ▶ 시위 사태로 인하여 홍콩 내 위기 발생 시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나 홍콩, 중국의 금융 리스크 전이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미·중 무역분쟁 등 다른 불확실성 요인과 연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
  - 우리나라의 직접적인 대(對)홍콩 금융 익스포저는 높지 않으나, 역대 금융위기 발생 시 주변국으로 전이된 사례를 통해 볼 때 외국계 자금 흐름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함.
  - 홍콩 시위 사태의 장기화 및 악화 시 우리 경제에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다른 요인들과의 작용 및 파급 경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차 례

### 1. 홍콩 시위 사태의 개요

- 가. 배경
- 나. 홍콩과 중국의 입장

### 2. 홍콩 시위 사태의 경제적 영향

- 가. 향후 전개 양상 전망
- 나. 홍콩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 다. 중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 라. 기타 영향

### 3. 시사점

# 1. 홍콩 시위 사태의 개요

## 가. 배경

■ [직접적 배경] 이번 시위 사태는 홍콩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범죄인 인도 법안」에 대한 정부와 홍콩 시민 간의 논쟁에서 시작됨.

- 홍콩 정부는 2019년 4월 3일, 찬통카이(陳同佳) 사건<sup>1)</sup>을 계기로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도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범죄인 인도 법안(일명 「송환법」)」을 추진함.
- 「송환법」에는 타이완뿐만 아니라 중국 본토 및 마카오 등도 포함돼 있어 홍콩 시민들은 이 법안이 악용될 것을 우려하며 거세게 반발함.<sup>2)</sup>
- 「송환법」 철회 및 캐리 램 행정장관에 대한 사퇴 요구로 시작된 시위는 경찰의 무력진압 대응 등으로 민심이 악화되어, 최근에는 반(反)중국 및 민주주의와 자유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로 확대됨.

■ [간접적 배경] 홍콩 시위 사태는 정치적, 경제적 및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도 발생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음.

### 1) 정치적 요인: 행정장관 선출 방식에 대한 불만

- 중국은 홍콩에서 일국양제(一國兩制)가 실시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홍콩기본법(이하 「기본법」)」을 마련하고, 1990년 4월 4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에 관한 결정(关于中华人民共和国香港特别行政区基本法的決定)」을 통해 「홍콩기본법」이 통과됨.
- 「기본법」에 따르면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의 수반은 행정장관이며, 행정장관은 만 40세 이상의 홍콩에서 연속하여 20년 이상 거주하고 외국에 거주권이 없는 중국 국적의 홍콩특별행정구 영구성(永久性) 주민이 담당하도록 함(「기본법」 제44조).<sup>3)</sup>
- 「기본법」은 제45조 제2항에서 “행정장관의 당선 방식은 홍콩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는 원칙(循序漸進原則)에 따라 규정하고, 최종적으로는 광범위한 대표성을 띤 지명위원회(提名委員會)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후보자를 지명한 후 보통선거의 방식으로 선출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규정을 두어 선거 방식의 점진적 발전을 명시함.<sup>4)</sup>
- 이에 따라, 기존의 간접 선출 방식은 그 후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해 2017년 행정장관 선출 시 보통선거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음.<sup>5)</sup>

1) 찬통카이(陳同佳) 사건은 2018년 2월 타이완에서 벌어진 홍콩인 살인사건으로, 홍콩인 남성 찬통카이(20)가 여자 친구와 타이완으로 여행을 떠났다가 치명적으로 살해한 뒤 시신을 타이완에 유기하고 홍콩으로 귀국했지만, 홍콩 경찰은 찬통카이를 체포하고도 타이완으로 송환할 수 없었음. 타이완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고 있지 않았기 때문인데, 속지주의를 따르고 있는 홍콩은 영외에서 벌어진 사건이었기에 홍콩 내에서도 그를 살인죄로 처벌할 수 없었음.

2) 홍콩 민중은 중국정부가 부당한 정치적 판단에 따라 홍콩의 반중(反中) 인사나 인권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송환할 수 있다고 반발.

3) 노영돈, 최영춘(2014), 「홍콩기본법에 관한 연구: 홍콩기본법상 고도자치권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31권 4호, p. 97.

4) 위의 논문, p. 98.

5) 2014년 8월 31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 보통선거 문제와 2016년 입법회 구성방법에 관한

- 하지만 친중파가 다수인 선거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자 역시 친중파일 경우 일반 시민들은 친중파 중에서 행정장관을 뽑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보통선거의 의미가 없다며 비판이 일었고, 이것이 2014년에 대규모 시위(이른바 우산혁명)로 이어짐.
- 우산혁명이 성공하지 못하고 종료된 후, 다음 해인 2015년에 홍콩 정부는 중국 전인대 안에 따른 선거안을 발표했으나, 이것이 범민주파의 반대로 인해 입법회의에서 2/3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무산됨. 결국 2017년 행정장관 선출은 기존대로 간접선거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친중파로 분류되는 캐리 램이 신임 행정장관으로 선출됨.
- 이번 홍콩의 대규모 시위는 이와 같은 행정장관 선출 방식에 대한 불만이 배경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으며, 시위대는 시민이 직접 행정장관을 선출하는 진정한 보통선거를 요구하고 있음.

### 글상자 1. 홍콩 반환과 일국양제

- 1840~42년 아편전쟁에서 청나라가 영국에 패배한 이후, 영국은 난징조약을 통해 이후 155년 동안 홍콩의 주권을 행사함.
- 홍콩의 할양 만료 기간이 다가오자, 중국과 영국은 일국양제(一國兩制)라는 제도를 통해 홍콩의 중국 회귀에 합의했고, 홍콩은 1997년 중국으로 완전 귀속됨.
- ‘일국양제(一國兩制)’란 ‘한 국가에 두 개의 체제가 존재한다’는 뜻으로, 비록 홍콩이 중국으로 귀속되지만 홍콩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여 50년 동안 기존의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도록 한 제도임.
- 일국양제의 제도 아래 마카오도 1999년 포르투갈로부터 중국으로 회귀했으며, 중국은 타이완과의 통일 과정에서도 이러한 일국양제를 적용하려 하고 있음.

자료: 저자 작성.

### 2) 경제적 요인: 부동산 가격 급등, 빈부격차 확대 및 중국경제 의존도 확대에 대한 우려

- 2016년 홍콩의 지니계수는 0.539로 4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싱가포르의 지니계수가 0.4579, 미국의 지니계수가 0.411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심각한 수준임.
- 또한 Centa-City Leading Index에 따르면, 홍콩의 부동산 가격은 2003년 이후 평균 300% 증가하여 2019년 4월 기준으로 런던의 3배, 뉴욕의 4배에 달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
- 홍콩 시민들은 홍콩의 빈부격차 및 부동산 가격, 물가 등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원인의 하나로 중국 본토에서 유입된 중국 고위층 및 부유층의 자금을 지적함.
- 중국 본토와 홍콩 사이에 CEPA가 체결된 이후, 중국 본토에 대한 홍콩의 무역 및 서비스 수출입 의존도가 크게 상승하면서 중국경제로의 편입에 대한 홍콩인들의 경계심이 상승함.

### 3) 사회문화적 요인: 중국 본토인의 홍콩 이주 급증에 따른 사회문화적 갈등

- 1997년 홍콩 회귀 이후 홍콩으로 이주하는 중국 본토인들이 급격히 증가하여 홍콩인들과의 마찰이 발생함.

규정(关于香港特别行政区行政长官普选问题和2016年立法会产生办法的决定)을 통과하여 2017년의 행정장관 선거는 보통선거의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결정함. 이는 홍콩의 경제계, 전문가집단, 정치계, 사회중요계에서 각각 300명씩 선발된 1,200명의 선거위원회(후보추천위원회)가 2~3인 정도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이들을 대상으로 일반 시민들이 보통선거를 통해 행정장관을 선출하는 방식임.

- 특히 홍콩 국적 획득을 위한 본토 중국인들의 무분별한 원정 출산이 사회문제가 된 바 있으며, 공공장소에서의 매너와 홍콩 초·중학교 교과서에 공산당을 찬양하는 내용 등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한 바 있음.
- 중국 본토인의 대량 이주<sup>6)</sup>로 인한 홍콩의 독자성 상실과 북경어의 광둥어 대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됨.

## 나. 홍콩과 중국의 입장

### ■ [홍콩의 입장] 시위대, 홍콩 정부, 일반 시민의 입장으로 나누어 살펴봄.

- [시위대] 시위대는 홍콩 정부에 대해 5대 사항을 요구하며 강력히 항의하고 있음.
  - 홍콩 시위대는 △ 「송환법」 완전 철폐 △ 체포된 시위대 석방 △ 경찰의 과잉진압 조사·처벌 △ 행정장관 사퇴 △ 시위에 대한 ‘폭도’ 규정 철회 등을 홍콩 정부가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홍콩 정부] 폭력 시위로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강경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임.
  - 홍콩 정부는 계속되는 시위에 ‘잠시 연기’라는 법적 효력이 없는 애매한 태도를 견지하며 시위대의 요구에 불응하고 있음.
  - 시위 사태 해소를 위해 「송환법」 추진을 중단함으로써 자연 소멸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법안 철회보다 더 확실한 정부 의지를 보여준.<sup>7)</sup>
  - 폭력 시위에 대해 강경 대응할 것이며, 여타 시위대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음.
- [일반 시민] 일부 친중(親中) 성향의 과격 시위대 등장으로 시민들 사이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일반 시민 사이에서 여론이 조금씩 갈리고 있으나, 대체로 정부의 입장 표명이 불분명한 데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보는 의견이 다수임.

### ■ [중국의 입장] 일부 시위대는 중국의 일국양제 원칙의 마지노선을 건드렸고, 홍콩 문제로 중국 내정에 간섭하려는 서방 국가의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임.<sup>8)</sup>

- 중국은 시위 사태 원인을 중국 본토 상황과 사법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개정안에 대한 의심 및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여론몰이에 의해 비롯되었다고 보고 있음.
- [시위대에 대한 평가] 6월 12일 이후 시위대에 의한 일련의 사건들은 평화 시위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났음.<sup>9)</sup>
  - 일부 과격 시위대는 ‘일국양제 원칙’의 마지노선을 건드린 것으로 절대 용인할 수 없으며, 이는 곧 △ 국가 주권·안보에 대한 침해 △ 중앙정부 권력과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에 대한 도전 △ 홍콩을 이용한 중국 본토에 대한 침투·파괴 행위임.
- 반중 시위대의 비판이 ‘일국양제’에 대한 전면 부정 및 중국공산당 비판, 더 나아가 시진핑 주석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지자 중국 중앙정부는 이를 국가의 ‘핵심이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사태로 규정함.

6) 중국의 특별비자제도(中华人民共和国前往港澳通行证, One-way Permits)에 따르면 연간 학생 및 취업자와 별개로 약 5만 명의 이주가 허용되고 있음 (정확히 말하면 1일 150명이 상한선임).

7) 당장 법안 철회 절차를 밟더라도 3개월 후에 다시 입법이 가능하기 때문임.

8) 지난 7월 29일 전격 진행된 국무원 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의 기자회견에서 공식 표명.

9) 7월 21일 홍콩경찰 측에서 사제폭탄 제조현장을 급습하고 고성능 폭발물질인 TATP(트라이아세톤 트라이페록사이드)를 발견한 것을 근거.

- [서방 국가의 반응에 대한 입장] 시위대의 폭력행위에 대해 포용과 이해를 요구하고, 사회치안을 유지하려는 경찰에 대해 비판과 문책을 가하는 기이한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평가함.
- 왕이(王毅) 국무위원과 외교부 대변인이 여러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홍콩의 문제로 중국 내정에 간섭하려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으며, 홍콩을 중국의 골칫거리로 만들어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함.

### 글상자 2. 중국이 인식하는 6가지 핵심이익

- 중국은 국가이익을 대체로 ‘핵심이익’, ‘중요이익’, ‘일반이익’ 세 단계로 분류하는데, 여기서 ‘핵심이익(core interests, 核心利益)’이란 합의와 양보가 불가능한 최상위급 국가이익을 뜻함.
- 2011년 9월 6일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발표한 『중국의 평화발전(中国的和平发展)』 백서에서 중국은 6가지의 핵심이익을 언급
- ① ‘국가주권(国家主权)’, ② ‘국가안보(国家安全)’, ③ ‘영토완정(领土完整)’, ④ ‘국가통일(国家统一)’, ⑤ ‘중국 헌법이 확립한 국가 정치제도와 사회의 전반적 안정(中国宪法确立的国家政治制度和社会大局稳定)’ 그리고 ⑥ ‘경제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본보장(经济社会可持续发展的基本保障)’이 여기에 해당
- 일국양제는 영토완정 및 국가통일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공산당과 국가주석에 대한 비난은 중국 헌법과 정치제도에 대한 부정으로 해석될 수 있음.

자료: 『중국의 평화발전(中国的和平发展)』 백서(2011. 9. 6)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 중국과 홍콩 정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위가 진정되기를 기다리는 것으로 보임.

- 홍콩 정부가 시위대의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은 적으며, 중국이 국제적인 비난을 받게 되는 상황은 시위대가 바라는 바이기 때문에 인민해방군(PLA)의 투입 가능성도 낮음.
- 인민해방군은 1997년부터 6,000명가량 홍콩 시내에 주둔하고 있으며, 「기본법」 14조에 의거해 특별한 활동은 하고 있지 않음.
- 실제로 중국 공산당도 시위대를 더 자극해서 사태를 악화시키고 싶어 하지는 않음.
- 반중국적 인터넷 유저들의 페이스북, 트위터 계정을 공격하는 것으로 유명한 ‘띠바(帝吧)’ 게시판 멤버들이 홍콩 시위 참가자의 페이스북을 공격하려고 하자 중국정부가 중지시켰음<sup>10)</sup>

### 글상자 3.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14조

중앙인민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의 국방사무를 책임진다.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 사회치안의 유지를 책임진다. 중앙인민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에 국방사무를 담당하는 군대를 파견하나 홍콩특별행정구의 지방사무를 간섭하지 아니한다.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필요 시 중앙인민정부에 사회치안과 재해구제를 위해 군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주둔군대 인원은 전국성 법률을 준수하는 것 이외에도 반드시 홍콩특별행정구의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군대의 주둔 비용은 중앙인민정부가 부담한다.

자료: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中華人民共和國 香港特別行政區 基本法) 제2장 중앙과 홍콩특별행정구의 관계 제14조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10) Newsweek(2019. 8. 13).

표 1. 2019년 홍콩 시위 사태 경과

시기	사건
2월	- 홍콩 정부, 「송환법」 발의
3월	- 첫 「송환법」 반대 시위 발생
6월	9일 - 대규모 반정부 시위 발생(민간인권전선* 주도, 시위대 추산 100만 명)
	12일 - 입법회 법안 2차 심의 연기
	15일 - 법안 추진 항의하던 30대 시위대 추락사 - 람 행정장관, 법안 추진 잠정 중단
	16일 - 홍콩 사상 최대 규모 반정부 시위 발생(민간인권전선* 주도, 시위대 추산 200만 명)
	17일 -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중국 홍콩 행정장관 및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의 법에 따른 통치 지지 표명 & 외국 정부 및 정치인에 의한 선동 문제 제기
	30일 - 29일 법안 철회 요구한 여대생 투신자살에 이어 20대 시위대 투신자살
7월	1일 - 시위대 입법회 점거, 홍콩 정부 입법회 건물에 적색경보 발령
	2일 - 람 행정장관,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법회 점거에 대해 차원이 다른 폭력 시위로 규정, 2020년 7월 입기 만료 시 해당 법안이 소멸될 것이라 언급
	4일 - 법안 철회 요구하던 20대 시위대 투신자살(추락사 포함 4명 사망)
	19일 - 유럽의회, 「송환법」 철회 결의안 채택(중국정부에 대한 17개 요구 제기: 「송환법」 철회, 체포된 시위자 석방, 경찰 과잉대응에 대한 중립적 조사 등)
	21일 - 시위대 노린 '백색테러'*** 발생
	29일 - 중국 국무원, 홍콩 사태 관련 첫 기자회견에서 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 대변인 통해 입장 표명
8월	12일 - 시위대 점거에 따른 홍콩 공항 폐쇄로 230여 건의 항공편 취소, 익일 재개
	13일 - 홍콩 공항에서 일부 시위대 중국 본토인 공격 - 중국의 양제츠 정치국원과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뉴욕에서 긴급 회동
	15일 - 중앙군사위원회 소속 준군사 조직인 인민무장경찰(PAP) 선전(深圳)시에 배치****
	25일 - 홍콩 경찰, 시위대 진압과정 중 첫 실탄 경고 사격
	27일 - 람 행정장관, 시위대 5대 요구 수용 불가 표명 및 시위대 진압을 위한 법적 수단 검토 언급

주: \* 민간인권전선(CHRF): Civil Human Rights Front.

\*\* 홍콩 전철역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흰 옷을 입은 남성들이 송환법 반대 시위대(검은 옷) 및 일반 시민들을 무차별 폭행.

\*\*\* 실제로는 군사조직이나 형식상으로는 경찰조직으로, 주요 임무는 시위나 폭동 진압, 대테러 작전임.

자료: 언론보도 종합.

## 2. 홍콩 시위 사태의 경제적 영향

### 가. 향후 전개 양상 전망

■ 홍콩 정부의 완고한 입장 견지 및 시위대의 동력 상실로 사태가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

- 중국정부가 현재의 홍콩 시위를 단순한 「송환법」 반대의 차원이 아닌 국가의 핵심이익과 관련한 「일국양제」 차원으로 규정함에 따라 비타협적 자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큼.
- 또한 홍콩 정부가 비타협적 자세를 견지하면서 교섭이 정체되고,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시위대의 피로 누적 및 동력 약화에 따른 자연적 안정화가 예상된다.
- 이상과 같이 시위 사태가 전개될 경우, 홍콩의 경제기능은 유지되나 반정부 시위의 리스크가 잔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나. 홍콩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 ■ 홍콩의 국제적 위상 변화에 따른 경제적 기능 약화

- 이번 시위 사태 발생으로 인해 그동안 홍콩이 보유한 제도적 경쟁력인 자율성 및 독립성이 훼손될 것으로 보임.
- 홍콩의 신용 위험과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은 대체지 모색 및 중국시장에 직접 뛰어드는 등 홍콩의 경제적 입지 약화가 전망됨.
- 2019년 3월 기준, 홍콩의 세계금융센터 지수(GFCI)는 런던, 뉴욕에 이어 세계 3위임(싱가포르 4위, 도쿄 6위, 서울 36위).

표 2. 아시아 주요국 은행 부문 대외노출 현황

(단위: 십억 달러, %, 2019년 1/4분기 기준)

구분	홍콩	싱가포르	일본	한국	중국
총은행자산(A)	2,967	1,310	24,605	2,319	-
대외은행자산(B)	1,548	815	3,889	223	1,165
대외자산비중(B/A)	52	62	15	10	-
총은행부채(A)	2,980	1310	23,928	2,086	-
대외은행부채(B)	1,216	765	1,392	254	1,329
대외부채비중(B/A)	40	58	5	12	-

주: 은행의 국적과 상관없이 해당 국가에서 활동하는 국제은행의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작성됨.

자료: BIS Locational Statistics.

### ■ 홍콩의 입지 변화 예상 경로

- ① 외국인투자자 이탈 → ② 금융시스템 쇠약(글로벌 금융허브 지위 상실) → ③ 홍콩달러 가치 급락 → ④ 부동산 폭락 → ⑤ 부유층 이탈 → ⑥ 중산층 이하 주민의 비율 상승 → ⑦ 내수시장 위축

### ■ 실제로 홍콩 IB업계에 외국인투자자 및 부유층 이탈 움직임에 대한 보고가 있음.<sup>11)</sup>

- 부동산 개발업체 Goldin Financial Holdings는 최근 홍콩에서 발생한 '사회 모순과 경제적 불안정성'으로 14억 달러 규모의 카이탁공항 부지 입찰에서 철수함.<sup>12)</sup>
- 런던의 글로벌 송금서비스 업체인 TransferWise는 8월 들어 홍콩으로 1달러가 들어오는 동안 2.64달러가 빠져나가 나간 돈이 들어온 돈의 3배에 육박했다고 밝힘.<sup>13)</sup>

11) Hayman Capital, Moody's Investors Service, 京華山—증권.

12) SCMP(2019. 6. 11).

13) 『매일경제』(2019. 8. 20).

- 2019년에 홍콩인이 대만 이민청에 낸 이민 혹은 체류 신청 건수는 2,027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4.3% 늘었으며, 특히 「범죄인 송환법」 반대 시위가 본격화된 6월과 7월 동안 홍콩인의 이민·체류 신청은 681건으로 45.5% 급증함.<sup>14)</sup>
- 최근 홍콩달러의 약세는 자본유출 우려를 보여주는 징후임.
  - 홍콩달러는 2019년 7월 8일 7.7993hk\$/US\$로 저점을 찍은 이래 절하기조로 전환

그림 1. 홍콩달러/미달러 환율 추이



주: 홍콩은 홍콩달러/미국달러를 연동시키는 페그제(1미국달러= 7.75~7.85홍콩달러)를 유지하고 있어 환율 변동은 정해진 범위 내에 한정됨.  
자료: Bloomberg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검색일: 2019. 8. 20).

- 이와 더불어 미국이 홍콩의 자치권 약화를 이유로 1992년에 제정된 「미국-홍콩정책법(US-Hong Kong Policy Act)」을 폐기할 경우 홍콩 경제에 타격이 예상됨.
  - 「미국-홍콩정책법」이 폐기될 경우, 미국은 홍콩을 특별 대우하는 것을 중지하고 홍콩을 중국의 한 도시로 취급하여 홍콩에 대해 중국 본토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 홍콩이 중국 본토에 준하는 취급을 받게 되면 미·중 무역전쟁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홍콩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임.
    -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최근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의<sup>15)</sup> 통과를 위한 민주·공화당 양당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 사태의 행방에 따라 미국이 홍콩의 특별지위 철회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

14) SCMP(2019. 8. 19).

15) 2019년 6월 미 위원들이 발의, 미국이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서 홍콩의 특별지위 지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함.

#### 글상자 4. 「미국-홍콩 정책 법 (US-Hong Kong Policy Act, 1992)」

- 1997년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에 반환된 후, 서방 국가들은 홍콩 주민의 불안을 가리앉히기 위해 경제 특권을 부여해왔음.
- 1992년 미 의회는 홍콩을 중국 본토로부터 분리된 독립체로 대우하기 위해 「미국·홍콩 정책법」을 통과시켰음. 이 법은 홍콩에 미국의 민감한 기술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미국달러와 홍콩달러 자유 교환 등 중국과 차별화된 경제무역 특권을 부여하는 내용임.
- 이러한 혜택의 지속 여부는 중국이 홍콩에 대해 '일국 양 체제'를 보장한 1984년 '영·중 공동선언'을 지키느냐에 달려 있음.
- 이 선언에는 무엇보다도 중국이 홍콩의 높은 자율성, 자유, 법치를 50년간 유지하겠다는 약속이 전제되어 있음.
- 또한 이 법에는 "미국이 부여하는 특권을 홍콩이 유지하기에 충분할 만큼 자치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은 특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자료: WIKIPEDIA United States-Hong Kong Policy Act, [https://en.wikipedia.org/wiki/United\\_States%E2%80%93Hong\\_Kong\\_Policy\\_Act](https://en.wikipedia.org/wiki/United_States%E2%80%93Hong_Kong_Policy_Act)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다. 중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 홍콩 사태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① 홍콩의 역할 마비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과 ② 중국이 직접적 경제제재를 받을 경우의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음.

### ① 홍콩의 역할 마비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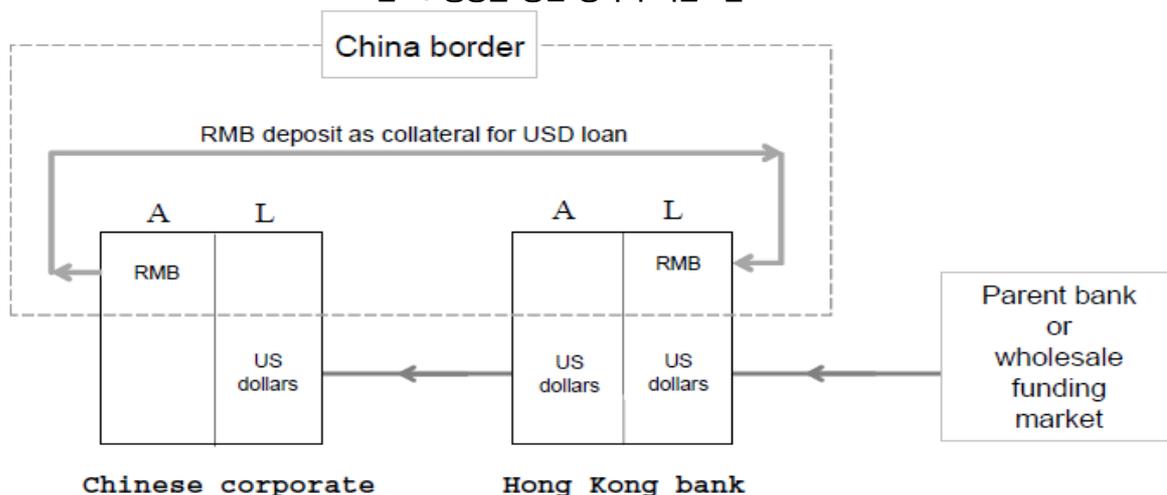
- 홍콩의 대외신뢰 하락으로 향후 중국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국제금융 패권정책에 차질 발생

- 홍콩은 중국의 자금조달 창구 역할을 하며, 홍콩 사태의 악화로 외국인투자 위축이 발생하면 중국에도 경제적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
  - 홍콩은 가장 규모가 큰 역외 위안화 시장이자, 역외 위안화 청산은행이 가장 먼저 개설된 곳으로(2003. 12), 역외 위안화 지급결제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국가(전체의 72.3%)<sup>16)</sup>
  - 중국 자본시장의 개방도가 미흡하여 역외로 유출된 위안화의 운용이 제약된 상황에서 홍콩은 역내시장과 역외시장의 연결기능을 수행
    - \* 중국정부는 선강통(深港通, 선전-홍콩 주식시장 교차거래), 후강통(沪港通, 상하이-홍콩 주식시장 교차거래), 채권통(債券通, 중국 본토-홍콩 채권시장) 등을 통해 자본시장 개방을 완만하게 확대
    - 딤섬본드(홍콩 내 위안화 채권) 발행 등을 통해 해외자금의 중국 본토 유입을 원활하게 하는 기능을 담당
      - \* 홍콩은 2010~18년 중국기업의 해외 IPO 중 73%를 담당. 중국기업의 해외 투자자 대상 채권 발행의 60%, 신디케이트론의 26% 담당(2019. 8. 19, Bruegel)

16) 2019년 6월 기준(자료: SWIFT). 그 외 영국(6.0%), 싱가포르(2.9%), 한국(2.8%), 미국(2.5%), 대만(2.4%) 순임.

- 중국 자본의 자금세탁을 위한 우회 투자를 포함하여 외국 기업의 對중국 투자의 상당 부분이 홍콩 경유 우회투자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2018년 중국에 유입된 FDI 1,383억 달러 중 홍콩이 차지하는 비중은 65.0%에 달함.
  - 중국의 낮은 서비스 개방 수준, 자금 운용 및 자금 반출입 여건, 중국-홍콩 간 CEPA를 이용한 서비스 투자의 용이성 등의 이유로 홍콩을 경유한 투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
- 한편 위안화 국제화 등 중국의 국제금융 패권정책도 향후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안화 국제화를 본격 추진하면서 위안화 무역·투자 결제 확대, 역외 위안화 금융시장 육성, 역내 자본시장 개방, 위안화 환율제도 개혁 등을 시행
  - 위안화 국제화 지수<sup>17)</sup>는 2015년 9월을 정점으로 하락\*하다가 2017년 6월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임.
    - \* 2015년 중 위안화 가치 하락, 중국정부의 자본유출 통제 강화 등에 기인
  - 향후 '일대일로'와 연계하여 위안화 국제화를 확대할 계획<sup>18)</sup>이나 구조적인 유출입 불균형 문제(자본시장 개방도 미흡, 무역·투자 결제를 통한 역외 유출만 추진)로 인한 한계

그림 2. 홍콩을 통한 중국의 자금조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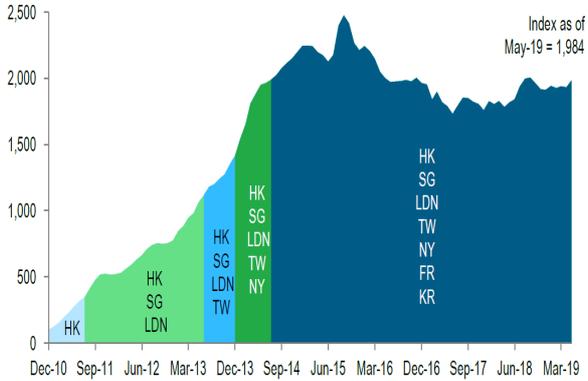
자료: Shin(2014).

17) SC(Standard Chartered) 그룹의 위안화 글로벌 지수(RGI: Renminbi Globalisation Index) 기준. RGI는 2010년 12월 31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주요 위안화 역외시장의 위안화 예금, 담보본드 및 CD, 무역결제 및 기타 국제결제, 외환거래, 외국인의 역내자산 보유 등 핵심부문의 성장세를 측정해 위안화의 국제화 정도를 나타낸 지수.

18) 일대일로 선상 국가와의 무역, 투자 확대를 통해 추진(위안화 대출, 해외직접 투자 확대), 핀테크 기업, 인터넷 금융 확대(알리바바 일대일로망 전략), 일대일로 선상 국가에만 자본시장 시범 개방 등이 가능.

그림 3. 위안화 국제화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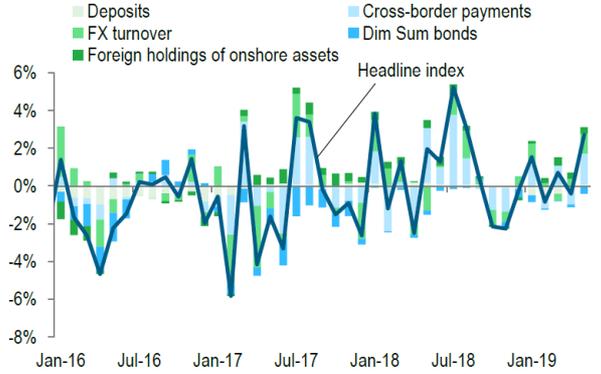
(단위: 2010년 12월=100)



주: 음영 안의 문자는 주요 위안화 역외시장을 의미. HK(홍콩), SG(싱가포르), LDN(런던), TW(대만), NY(뉴욕), FR(프랑스), KR(한국).  
자료: Standard Chartered(2019).

그림 4. 위안화 국제화 부문별 기여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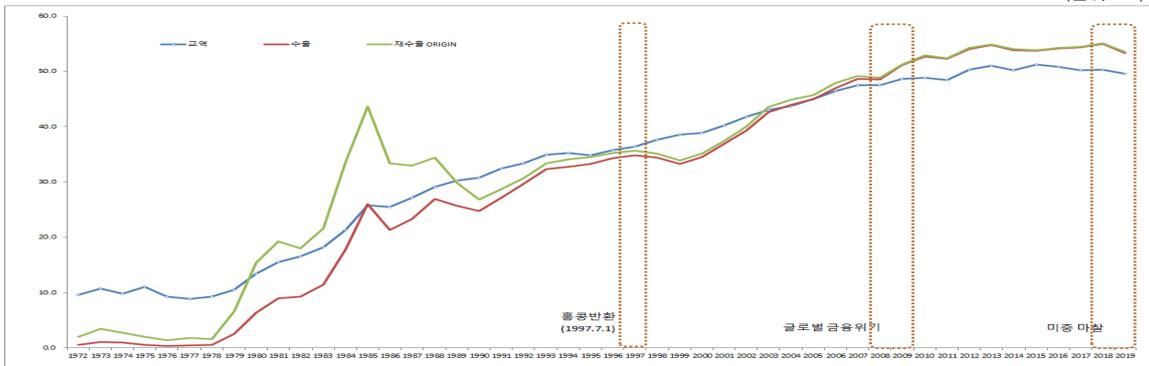
주: 위안화 예금(Deposits), 지급결제(Cross-border payments), 외환거래(FX turnover), 딴섬본드(Dim Sum bonds, 역외 위안화 표시 채권), 외국인의 역내자산 보유(Foreign holdings of onshore assets) 등의 월별 성장률.  
자료: Standard Chartered(2019).

■ 중계무역항으로서 홍콩의 역할 위축에 따른 중국의 교역량 감소 가능

- 홍콩은 중국 본토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으며, 중국 대륙의 중계무역항의 역할을 담당
  - o 홍콩 무역의 중국 의존도(2018년): 무역 50%, 수출 55%, 수입 46%, 재수출 조달처 55%
- 따라서 홍콩의 기능 마비 시 홍콩과 중국 모두 상품교역에 있어서도 타격이 예상

그림 5. 홍콩 무역의 중국 의존도

(단위: %)



자료: CEIC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검색일: 2019. 8. 18).

표 3. 홍콩 재수출의 원산국과 수출대상국

(단위: 백만 HK\$)

순위	DESTINATION(수출대상국)			ORIGIN(원산국)		
	TOTAL	4,117,443	100.0	TOTAL	4,117,443	100.0
1	China	2,268,117	55.1	China	2,350,962	57.1
2	USA	355,465	8.6	Taiwan	397,386	9.7
3	India	134,192	3.3	South Korea	261,765	6.4
4	Japan	128,435	3.1	Japan	197,420	4.8
5	Taiwan	83,743	2.0	Malaysia	133,941	3.3
6	Vietnam	80,729	2.0	USA	126,084	3.1
7	Germany	76,047	1.8	India	75,826	1.8
8	Netherlands	71,268	1.7	Thailand	74,831	1.8
9	Singapore	66,668	1.6	Singapore	56,813	1.4
10	Thailand	59,381	1.4	Philippines	49,015	1.2
11	Korea	56,837	1.4			

주: 홍콩 무역 데이터는 홍콩의 재수출(Re-export) 통계를 제공함.

자료: Hong Kong Census and statistics Department(검색일: 2019. 8. 18).

### ■ 또한 미국의 홍콩정책법(Hong Kong Policy Act) 폐기 시, 중국은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것으로 전망

- 중국기업들이 미국에서 자본을 조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홍콩은 중국 역외 금융센터로서 가치가 높은 상태임.
- 그러나 중국이 「송환법」 통과를 고집하거나 홍콩 시위대를 무력 진압한다면 홍콩이 독립 자치구의 지위를 상실했다는 이유로 미국의 홍콩에 대한 특혜 폐지를 막을 수 없게 되며, 홍콩은 즉시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지위에 치명적 손상을 입을 것임.
- 이에 따라 중국기업들에는 자본 접근 기회가 줄어들 것이고,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국영기업의 가치도 급락할 것으로 전망

## ② 중국이 직접적 경제제재를 받을 경우의 영향

### ■ 미국을 비롯한 서방권이 중국에 대해 경제제재를 할 경우 미·중 무역협상은 장기 표류할 것이며, ① 중국 내 외국인 자금 이탈 → ② 중국 실물경제 악화 → ③ 위안화 가치 급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sup>19)</sup>

- 서방권의 대중국 경제제재로는 크게 무역거래 금지, 금융거래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중국의 외국인 자본 대거 이탈, 중국 실물경제 급둔화, 중국 물가 급등, 주식 및 부동산 자산 가격 폭락 등 중국경제의 혼란이 예상된다.
- 실물경제 파급경로: 서방권의 경제제재 → 중국의 수출입 경로 축소 → 중국 제조업 생산 급감 및 소비자 물가 폭등 → 중국 소비·투자 심리 위축 → 실물경기 급둔화

19) 중국과 서방권에 실물·금융 분야의 상호 연계성이 큰 상황에서 서방권이 자신들의 피해를 감내하면서 상기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본고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중국경제에의 파급경로를 실물과 금융 부문으로 분류하여 전망하였음.

- 중국정부는 대규모 정책자금을 투입하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물경기의 급둔화 및 물가 급등 등 단기적인 충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중국의 확장적 거시정책은 ‘국진민퇴’ 현상 발생으로 ‘국유기업(철강, 석탄, 시멘트 등) 공급과잉 확대 → 기업 이익 감소 → 기업부채 증가 → 한계기업 도산’ 등 중국 특유의 구조적 문제도 심화될 것으로 보임.
- 금융부문 파급경로:
- ㉓ 서방권의 경제제재 → 중국 내 외국 자본의 대거 이탈 → 위안화 가치 급락 → 외환보유고 급감 → 중국 정부 및 기업의 외채 부담 가중
  - ㉔ 서방권의 경제제재 → 중국 내 외국 자본의 대거 이탈 → 중국 주식 폭락 및 부동산 버블 붕괴
  - ㉕ 서방권의 경제제재 → 중국 내 실물경기 심리 위축으로 자금난 가중 및 금리 상승 → 실물경기 위축 및 가계·기업·정부 부채 리스크 증가
- 중국정부는 외화유출 금지, 위안화 환율 안정화 조치 등을 시행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 금융·외환 시장에서 단기적인 혼란과 충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중국정부는 경기하락에 대응하여 유동성 공급 확대 등 확장적 통화정책을 통해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경우 중국 정부·기업·가계 부채 리스크는 증대될 가능성이 크고, 물가가 급등한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 라. 기타 영향

### ① 경제 외적인 영향

- 캐나다: 특히 밴쿠버로 홍콩인 이민자가 다시 쇄도함. 이른바 1997년 홍콩의 중국 반환 이후 제2차 이민 붐 가능성 존재
  - 캐나다의 경우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 이민자 확대정책을 시행하여 이민자 수용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임.
  - 가장 최근에 진행된 인구조사인 Vancouver Census 2016에 따르면 밴쿠버 지역의 총인구 242만 6,245명 중 홍콩계는 23만 5,643명으로 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계(본토)는 그보다 많은 26만 3,532명(10.9%) 수준이며, 그 밖의 주요 아시안계로는 필리핀 13만 3,925명, 인도계 24만 3,135명이 있음.
- 대만: 역설적이지만 일국양제의 실패가 명확하게 입증된 이상 대만의 지위가 보전될 가능성이 높아짐.
  - “No more Hong Kong”의 흐름이 2020년 1월 11일 총통선거를 앞둔 현(現) 차이잉원(蔡英文) 정부에 유리하게 작용
  - 차이(蔡) 총통 취임 이래 지속적인 경제상황 악화로 인해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현 정권(민진당)에 대한 국민의 신임이 약화되고 있었으나, 이번 홍콩 사태를 계기로 중국 위협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며 재선 가능성 대두

## ② 경제적 반사이익

### ■ 싱가포르: 홍콩을 대체하여 아시아 금융허브의 지위를 차지

- 홍콩과 싱가포르가 전통적으로 아시아 최고의 금융허브와 글로벌 기업의 아·태지역 본부 유치 분야에서 경쟁관계를 형성해왔다는 점에서, 이번의 홍콩 사태는 단기는 물론이고 중장기적으로도 싱가포르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
  - 홍콩의 불안정이 장기화되거나 악화된다면 많은 다국적 기업들의 금융자산은 물론 홍콩 부유층의 프라이빗뱅크(PB)이 싱가포르로 이전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홍콩 사람들의 싱가포르 이민이나 유학 수요도 증가할 수 있음.
  - 이와 함께 홍콩이 동남아 화교(華僑) 자본의 對중국 투자에 있어 전략적 중개지 역할을 수행해왔다는 점에서, 싱가포르가 점차 이러한 역할의 대안지가 될 수 있다는 입장

표 4. 아시아 허브로서 홍콩과 싱가포르의 위상 비교

구분	홍콩	싱가포르	한국
해외기업 유치 (아시아 지역본부)	1,389개	4,200개	93개
무역규모(2018년 기준)	1조 2,077억 달러 (세계 7위)	7,777억 달러 (세계 15위)	1조 1,443억 달러 (세계 9위)
외국인 직접투자(FDI)	1,157억 달러 (세계 3위)	776억 달러 (세계 5위)	145억 달러 (세계 21위)
해외투자(ODI)	852억 달러 (세계 4위)	371억 달러 (세계 12위)	389억 달러 (세계 11위)
글로벌 금융센터 순위 (Z/YEN, 영국계 컨설팅 그룹, 2018년 3월 기준)	세계 3위	세계 4위	서울, 세계 27위
컨테이너 기준(2017년 기준)	홍콩항 세계 5위	싱가포르항 세계 2위	부산항 세계 6위

자료: 해외기업 유치 통계는 Cushmean & Wakefield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사 2016년 기준; 무역통계는 IMF 세계무역통계; FDI와 ODI 통계는 UNCTAD 투자통계.

## 3. 시사점

### ■ 홍콩 위기 발생 시 우리나라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나, 홍콩, 중국의 금융 리스크 전이 가능성에 대한 대비와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

- 우리나라의 직접적인 對홍콩 금융 익스포저는 높지 않음.
  - 국내 외은지점의 홍콩자산 비중은 2019년 3월 말 기준 8.4% 수준이며, 이는 우리나라 총 은행자산 대비 0.8% 수준임.

- 홍콩에 진출해 있는 한국계 은행은 한국기업 위주로 대출을 하고 있어 對중국 여신 비중은 20% 수준이며, 자금조달은 주로 현지 차입금(53%, 2016년 기준)에 의존
    - \* 2017년 말 기준, KEB하나은행(40억 5,000만 달러)이 한국계 은행 중 자산규모가 가장 크며, 홍콩에 진출해 있는 한국계 은행 10개의 총자산은 138억 5,000만 달러 수준
  - 역사적으로 금융위기 발생 시 주변국으로 전이된 사례가 많으며, 우리나라의 對중국 의존도를 감안할 때 외국계 자금 흐름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
-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홍콩 시위 사태가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전개될 경우 예상되는 홍콩의 경제기능 마비 및 중국의 국제적 고립 심화가 가져올 경제적 영향에 대한 평가 및 대비 필요
- 홍콩의 신용 위험도가 상승함에 따라 글로벌 기업이 아시아 지역본부·중계무역 대체지를 모색하거나 중국시장으로 직접 진출할 전망
- 홍콩이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지위를 상실할 경우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홍콩 사태가 미·중 무역분쟁 등 다른 불확실성 요인과도 연계되어 있으므로 사태가 악화될 경우 우리 경제로의 파급 경로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 필요
- 홍콩 사태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권이 중국에 대해 경제제재를 가할 경우 미·중 무역협상은 장기 표류하고 중국 내 외국인 자금 이탈, 실물경제 악화, 위안화 가치 급락 등 중국경제의 급격한 둔화 및 경착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홍콩의 불안정성이 장기화될 경우 싱가포르가 홍콩의 '아시아 비즈니스·무역·우회 투자허브' 기능을 대체할 수 있을 것 인지에 대한 모니터링과 그에 따른 대책 필요 **KIEP**